

우리나라 勞使紛糾의 배경과 해결 方案模索

安 明 濬

〈東洋시멘트(株) 梁山工場 工場長〉

I. 序 論

우리 經濟는 1986 年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까지의 國際收支赤字-國內貯蓄不足에서 벗어나 國際收支黑字-國內貯蓄剩餘의 형태로 轉換 되었다.

이러한 우리 經濟의 變化속에서 6·29 宣言으로 인한 社會 各分野의 民主化 要求로 勞動現場에서는 1988 年 9 月 23 日 현재 총 勞使紛糾가 3,434 건이나 발생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이제까지 한국工業化의 特質과 이를 뒷받침한 社會, 政治体制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勞使間의 對立과 葛藤이 最近 急變한 民主化의 要求로 尖銳하게 表出된 것이다.

이에 따라 長期化 내지는 잠복화된 勞使紛糾는 國民經濟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6·29 宣言이후 政治民主化에 대한 政局의 方向과 더불어 經濟民主化의 要求도 높게 되었다. 政治, 文化, 經濟, 教育등 모든 分野가 모두 重要하겠지만 經濟分野의 民主化야말로 國民生活, 나아가 國家富強의 기틀이 되는 것이기에 노사 문제는 우리가 解決해야 할 가장 重要한 時代的 課題인 것이다.

지난 勞使紛糾는 결국 돌발적이거나 一時

的인 현상이 아니며, 經濟發展 過程에서 累積된 不均衡이 經濟成熟期를 맞이하여 是正되는 過程으로 과도기적 전환기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노사분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움직임과 새 問題點을 政府 및 各 業界와 企業들에게 提示하였으며 이에 대한 對應策이 根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勞使紛糾는 우리 經濟에 高질적 不安要因으로 남게 될 것이다.

II. 勞使紛糾의 背景

우리는 李朝 封建社會와 日帝下의 植民地 經濟를 거쳐 解放과 더불어 資本主義 國家로 이행되었지만 1960 년대 이전까지는 絶對的 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自由黨 政府는 經濟政策을 計劃하기 보다는 友邦國으로 부터 救護米를 얻어 國民들의 餓渴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이 후 共和黨 政府가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는 傳統的 農業社會에서 產業社會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農村의 人口는 都市로 集中하기에 이르렀다.

1970 年代 政府는 우선 우리가 잘사는 방법이

오직 경제성장 위주의 經濟政策과 수출 드라이브인 정책을 推進하였다. 그 결과

1. 官主導에 의한 經濟는 國家經濟 開發이라는 時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肯定的 役割을 수행하였다.

2. 輸出主導型 政策으로 짧은 期間에 外型的 成長 및 國民所得 또한 높아지면서 後進國으로부터 新興工業國家로 進入하는데 成功했다.

3. 반면 勞使政策은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勞動三權 留保)을 設定하여 企業人은 生産管理, 財務管理를 맡고 政府는 勞務管理, 즉 勞動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대변하는 어떤 政治的 組織도 許容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政府主導의 工業化를 推進한 우리의 經濟·勞動政策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① 官僚行政과 그에 따른 他律的 經營體制

② 特定人의 金融惠澤으로 不信風調의 만연과 施設投資, 技術投資 보다는 不動產 投機가 盛行하여 企業은 亡해도 事業主는 亡하지 않는다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經濟成長에 따른 資本의 蓄積過程이 不均衡했으며 또한 재벌企業에만 經濟力이 集中되면서 相對的으로 中小企業의 成長은 뒤떨어졌고 외형적 성장에 비해 內實은 절름발이식의 구조로 政府主導型 經濟體制의 전형적 모델이 빚은 規制와 資本主義의 病弊가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은 산업구조의 불균형이라는 기 현상과 함께 國民經濟에도 짙은 그늘을 던졌다.

③ 일부의 低임금과 劣惡한 勤勞條件 속에서 억눌려 온 勤勞者의 不滿고조, 인간중심의 경영을 경시한데 따르는 여러 문제점이 대두하였다.

④ 勞動問題를 政府가 直接 다루고 事業主는 정부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였으며 건전한 노동조합의 育成과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事業主는 勞動問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관심을 갖지않고, 자기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었다.

⑤ 大部分의 企業은 專問經營體制라기보다는

owner 中心體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不合理的 經營이 持續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問題點으로, 우리는 비록 絕對的 貧困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均衡的 成長이 아니라 國民階層間의 不均衡現象 즉 「所得의 分配격차와 함께 왜 나만 못 사는가?」 「나도 政策的 支援만 받으면 成功할수 있다」는 등의 相對的 貧困에 대한 不滿이 고조하게 됐다.

지난 勞使紛糾는 위에서 約述한 바와 같이 一時的인 爆發이 아니고 經濟發展過程에서 생긴 分配問題와 勤勞者들의 綜合的인 대우가 우리 경제 발전정도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그동안의 持續的인 不滿이 民主化에 따른 政治的 해방무드를 타고 그 內容도 다양하게 분출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三. 勞使紛糾의 解決方案

우리 經濟의 향후 進路를 결정하는 노·사문제 는 우선 지난 勞使紛糾에서 나타났던 勤勞者들의 累積된 慾求가 무엇이었으며 이에따른 要求事項이 나타나게 된 原因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合理的 해결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1) 累積된 慾求의 분출

6·29 宣言이후 國家 基幹產業에서 부터 서비스 業種에 이르기까지 勞使紛糾 發生件數는 모두 3,233건이며 勤勞者들의 要求條件 또한 千差萬別이다. 要求조건의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금 正率引上(2%~50%)

② 기본급 正액인상(월 2만은~15만원)

③ 상여금 인상

④ 各種 手當 新設要求(가족수당, 근로수당, 복지수당, 위험수당, 공해수당 등)

⑤ 特別히 生産職勤勞者들의 要求는 2교대 폐지와 3교대 勤務制 實施(1일 8시간 근로제)

기타 제시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면

- 초과 근무시 법정 잔업수당 지급
- 퇴직금 누진제 실시
- 도급제 폐지
- 관리직과 동등한 통근버스 이용
- 自社製品 強賣後 급여공제 중지
- 법정 유급휴일 실시
- 국경일 휴일 인정
- 연월차 유급휴가 실시
- 간부식당 폐지
- 토요일 오전 근무
- 체조시간 폐지
- 생리휴가 실시
- 의사(擬似) 진폐 및 규폐환자 법정 유급휴가 보장
- 두발단속 금지
- 간이 세면대 설치등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농성과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일부업체는 노동관계법규가 보장하는 법적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근로자는 노사합의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과대한 요구를 하는등 건전하고 성숙된 노사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이 많았다.

2) 勞動의 人間化(quality of working life)

이제까지 우리社會의 勞使關係는 低임금, 長時間勞動, 劣惡한 作業環境, 雇傭의 不安定性과 解雇의 단연, 낮은 수준의 福祉, 勤勞者에게 不利한 勞動關係法의 制定, 勞動組合 運用역량의 미흡과 기능수행상의 제약, 使用者의 前近代的 經營思考方式 등으로 인한 非民主的 關係가 大部分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重要視 해야 할 것은 「人間다운 대우」 「人間답게 살고 싶다」 「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다」는 要求로써 이는 각 紛糾現場의 共通된 구호로 등장했다. 이러한 要求를 受容하기 위해서는 「勤勞者는 生産을 위한 道具가 아니라 經濟主體의 하나인 家計를 끌어나가는 人間」이라는 점을 重視해, 적어도 生活를 영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賃金을 支給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의 자아완성과 사회에 봉사하는 주체인 人格者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勞組育성과 勤勞者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인격적 待遇는 産業構造 高度化過程을 오히려 앞당기게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對立 보다는 協調的 勞使關係

協調的 노사관계에 의한 産業平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勞動者는 怠業이나 罷業을 피하여 단체행동을 우선하는 등 단체 交涉을 거치지 않고 長期的으로 操業을 中斷시키지 自身들의 要求만을 제시해서는 않된다. 또 노동쟁의중에 公共器物을 파괴하는등의 不法行爲는 건전한 勞組活動에 대한 認識不足과 우리經濟發展을 파탄으로 몰고갈 그릇된 행위이다. 그리고 勞組의 公正한 運營을 위해 代表의 選出은 直選制化하고, 勞組運營 상황은 언제든지 公開하므로써 勞組幹部에 대한 不信을 불식시키는등 조직 분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時間의 妥協과 忍耐와 適應의 過程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위험성 있는 伏兵들이 이번 紛糾에서 그 實態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노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使用者는 勞組가 골치아픈 存在가 아니라 勞使共榮의 바탕하에서만 진정한 生産性向上과 經營合理化가 可能하여 勞組가 使用者측의 要求 전달 窓口로서 役割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肯定的인 측면으로 인식하는것이 必要할 것이며 공개경영을 통해 근로자들도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從業員 持株制를 확대하는 方法도 바람직 스러울 것이다.

또한 일부 企業家들이 아직도 企業을 自身의 所有物로만 간주하여 노조를 적대시 하고 勞組設立 움직임이 있을때 마다 관련자를 解雇하거나 不利益을 주는등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온 것도 이번 노사분규 해결에 큰 장해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獨立된 勞務管理部署를 만들어 근로자와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對話를 갖도록 할 것이며, 노조에 대한 인식을 改善하여 노사간의

진취적인 交渉能力을 제고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앞으로 노사문제는 法으로 따지고 法으로 해결하기 전에 勞使間 同參意識 「파트너」 의식과 더불어 보람과 긍지가 形成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4) 低賃金 時代의 脫皮

이번 勞使紛糾로 인한 賃金引上을 生産性 向上으로 連結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며 나태해진 勤勞意慾을 고취하고 손상된 投資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對策이 必要할 것이다.

88年 이후의 國內企業 환경은

1. 高원貨 時代
2. 高賃金 時代
3. 高福祉 時代
4. 高生産性 時代

5. 高技術 時代 즉 5 高時代의 새로운 經營戰略을 導入해야 할 것이며 지난날의 低임금을 바탕으로 한 成長戰略에서 과감히 脫皮해야 할 時期이다.

앞으로의 企業은 높은 収益性을 올리지 않고는 生存自体가 위협받을 것이며 규모보다는 収益性이 커야 高임금의 高級人力을 確保하여 國際競爭力도 기르고 企業財務構造도 改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投資도 하고 技術開發도 할 수 있는 善循環의 成長過程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의 政策的 배려와 支援도 必要하겠으나 企業인도 새로운 經營哲學과 企業成長도 正當한 利潤의 極大化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過去처럼 企業規模 伸長이 곧 利潤增大를 의미하던 低임금 時代가 지났다는 事實을 재인식한 토대위에서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5) 所得分配 過程의 改善

所得은 正當한 價格 메커니즘을 통해 生産에 參與한 生産要素 즉 勞動과 資本에 分配되는 것이 資本主義의 經濟原理다. 그런데도 所得의 一部가 生産活動에 참여치 않은 第3者에게 누출되는 것 다시말해서 「소득의 누수」중 첫째로 準租稅(① 협회비, 수수료 ② 기부금, 성금등 반

강제적부담)가 우리나라 企業의 경우 매출액의 0.8% 수준에 이르러 日本에 비해 배를 넘는다는 分析이다.

둘째, 研究개발비의 3 배에 이르는 企業接待費도 매출액의 0.3%나 되는 것을 크게 줄여 勞使인상분에 充當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低金利-高貯蓄을 實現시킬 수 있는 政策의 妙를 찾아내야 한다. 高金利를 持續함으로써 産業의 成長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所得分配에 있어 근로자의 몫을 잠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 企業의 製造原價 구성을 볼때 金利 1%포인트 引下는 勞動費를 구성하는 임금을 5%引上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韓銀이 조사한 勞動所得 分配에서도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比重은 84년 49.1%, 85년 48.3%, 86년 46.7%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상승이 生産성 增加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이며 근로자들도 1인당 GNP 2,700만 달러의 時代를 實感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번 紛糾를 통해 「絕對的 結果의 平等」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公平이란 「사람의 能力과 成果에 따라 差等を 주는 일」 즉, 일을 잘하고 일을 올바르게 또한 큰 업적을 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똑 같은 대우보다 能力別로 대우를 받는 것이 진정한 公平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間接적 要因으로 크게 지적되는 것이 잘못된 流通過程과 多段階流通構造이다. 이는 物價安定을 阻害하고 특히 生必需品인 公産品과 農産品의 유통마진이 50%가 넘는 경우가 많아 우리 家計에 生計費 負擔의 과중한 原因으로 分析되므로 이를 과감히 해결할 對策이 必要하다.

6) 政治, 經濟 民主化는 共存의 길이다.

政治的 民主化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經濟의 民主化 要求역시 어떻게 수렴하여 合理的으로 수용 하느냐의 問題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企業人들은 自由롭게 創意力을 發揮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熱心히 일한만큼의 댓가를 끌고 루 分配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말로 市場經濟의 原理인 競爭力을 키우게 되고 經濟의 핵심인 生産性을 向上시키는 原動力이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諸般 與件들이 合理的일때 效率의 이고 能率的일 것이며 勞使間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관계로 定立된다면 하루 製品을 10個 생산하는 勤勞者들도 12個 만들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이다.

特權을 누리고 特權을 입는 사람이 있고, 銀行빚을 산더미로 깊어진 企業일수록 활개를 치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버젓이 용인되는 經濟體制로는 결코 公平하고 진정한 民主主義의 社會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法과 規則을 지키고 良心으로 살려야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社會로 政府主導經濟를 民間主導經濟로 바꾸어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7) 紛爭場(企業)이 우리모두의 「삶의 터」란 認識의 提高

우리는 資本主義 經濟속에서 살고 있다. 이 社會에는 수 많은 生活手段이 있겠지만 우리 現代人の 大多數는 企業이란 組織體 內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國民은 自己의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받게 되고 市場機能의 活性化에 따른 資源의 效率의인 配分이 이루어져 一般의으로 國民의 富가 增大되며 中産層의 幅도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高度産業社會에서 企業은 우리모두의 「삶의 터」로서, 企業家は 財貨를 生産하고 勤勞者는 用役을 販賣하는 組織으로 良質의 財貨와 用役을 저렴하게 生産供給하는 第1次的 責任을 다해야 할 것이며 社會構成의 기초체인 家庭을 꾸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人間다운 생활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해주는 所得 즉 생활비를 保障받는 일터란 것을 깊이 認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最高經營者는 모든 社員들로 하여금 「會社는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하여주는 일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造成하여 주고 모든 社員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 經濟를 成長發展시키는 主体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企業이란 營利를 目的으로 즉 利潤極大化를 目的으로 하는 組織體이다.

그러나 企業이라는 經濟單位體를 利益이라는 視點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社會가 必要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착하여 그 必要를 充足시켜 주는 主体라고 생각할 때 企業의 存在價值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8) 國民 意識構造 改善이 시급

고된 일 터에서 점심을 거르고 일하던 때가 불과 30여년 전인데 이제 겨우 국민소득 1인당 GNP 3천달러를 넘 보는 수준에서 호화주택, 고급승용차, 외국 유명 브랜드 의복등만 찾는 풍토등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식사 한 끼를 위하여 수백리 길을 찾아가는 일부 여유인들의 習性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疎外感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사치·허영의 식을 조작하게 되는데 이에대한 냉철한 自覺이 있어야 할 것이다.

個人的 不滿이 모여 集團의 불만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불만이 되며 결국 조직도 국가도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過去 너무나 못 살았던 우리가 「하면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까지는 좋았지만 오직 富의 追求만을 겨냥하고 「못사는 사람이 병신이라는」 비뚤어진 價値觀으로 物質萬能사고가 만연되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잘못된 意識構造가 改善되어 우리의 美風良俗을 자랑하던 전통의 道德의 바탕위에 올바른 문화와 경제적 평등이 社會 各 分野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民主化를 꽃 피우게 하는 條件中的 하나가 國民의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몇번 지적하였다.

이는 社會의 基礎인 家庭에서 부터 學校의 教育過程에 이르기까지 職場, 지역사회 할 것 없

이 倫理와 道德的 정신적 敎育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結 論

우리경제는 아직도 많은 外債負擔, 技術不足, 原資材 海外依存, 外國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

보자는 努力의 表出로 재인식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의 결핍된 노사關係의 再定立은 우리경제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정부는 각각 자율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질서지켜 민주시민

차례지켜 문화국민